

제3주제 :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의 역할

제3주제 토론

■ 사회자 : 김성순(단국대)

□ 발표자 : 김종웅(대구한의대) · 신두섭(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김신호(대구한의대)

지역 기업유치와 지방재정 정책의 방향

□ 토론자 : 서정섭(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삼주(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만수(한양대), 최병호(부산대)

■ 사회자 : 김흥래(前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 발표자 : 노홍석(전라북도 투자유치과장)

기업유치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 토론자 : 배성길(경상북도 투자유치과), 유경문(서경대),
정병희(순천시의회), 정종필(부산대)

■ 김종웅 (대구한의대)

주제발표 : 지역 기업유치와 지방재정 정책의 방향
(자료 참조)

■ 사 회 (김성순, 단국대학교)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행정연구원의 이삼주 박사님 토론하시겠습니다.

■ 이삼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최근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활을 걸고서 기업유치, 특히 외국인 기업유치에 대해서 상당히 활발한 정책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업유치를 위한 전략을 어떻게 형성하고 집행할지에 대해서 논문을 발표하셨다는 점에서 상당히 희귀성 있는 논문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이 주제가 재정정책 방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정책뿐 아니라 종합적으로 다양한 재정정책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셨다는 점에서 상당히 정책적으로 의미가 있는 논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발표 논문을 몇 가지 핵심이슈로 한번 정리를 해 보려고 했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저는 두 가지 정도로 판단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기업유치를 위한, 특히 외국기업유치를 위한 정책수단의 다양성. 그리고 또 하나는 기업유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자율성이나 차별성이 제고 돼야 된다는 쪽에서 전체적인 수단들이 전개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봤는데요. 이 두 가지 점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저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책수단의 다양성이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기존에 우리가 기업유치를 위해서 대체로 조세를 통한 기업유치 수단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지방세가 가지고 있는 특성상 기업유치를 위한 수단으로써는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국세의 경우에는 상당히 다양한 조세감면 제도를 구비하고 있지만 지방세의 경우에는 조세감면 딱 하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선 한계가 있어왔고. 그래서 금융지원이라든가 인프라 이런 쪽에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동감을 하구요.

두 번째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나 차별성이 제고되어야 된다는 부분도 같이 동감을 하는데 약간 부연설명을 해보면 기업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기업의 특성에 맞는 정책수단이 발의되어야 된다는 것이 선행연구에서도 그렇고요. 그렇게 돼야만 기업유치의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데 일례로 이렇습니다. 금융과 관련된 기업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관세를 철폐해 준다. 이건 전혀 효과성이 없는 수단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정책수단이 강구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 정책수단을 누가 강구해야 되느냐. 최근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보면 투자촉진법이 개정되면서 과거의 positive 방식에서, 다시 말해서 허용열거주의에서 negative 방식으로 제한열거주의로 바뀌었습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제한하지 않으면 모든 업종들이 다 투자유치가 가능한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표준산업분류에 보면 1,121종의 업종이 있는데 이 중에서 68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대해서는 투자유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중앙부처 차원에서는 이런 많은 업종별로 차별화 된 전략을 강구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해야 되느냐. 그건 바로 투자유치를 기대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건 바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면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성이 있어야 되고 차별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지만 일례로 과거에 우리가 투자유치와 관련된 ‘지방세 감면’ 하면 감면율이 딱 정해져 나왔는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차별화, 자율화 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같이 딱 단일의 기준이 아니라 범위를 줘서 그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제도들이 앞으로 강구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만약 그런 제도가 강구된다면 지방자치단체와 투자유치기업간에 어떤 협상도 가능한 그런 장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차별성이나 자율성이 강구되어야 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 발표논문과 제가 생각을 같이 하는 부분이구요. 약간 차이가 있다고 하긴 그렇지만 일단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기업유치와 관련된 효과성 부분입니다. 기업유치를 하게 되면 특히 외국기업이나 기업유치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효과는 지역경제 활성화효과, 또 주민들의 고용증대, 소득증대효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증대효과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주목하고 있는 싶은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증대효과부분입니다. 과연 정말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증대효과가 있느냐. 있겠죠.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시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업을 유치하게 되면 본문에 선행연구 중에서 '경험적 연구'란 논문을 인용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증대효과가 있는 쪽으로 기술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인기업을 유치하게 되면 8년 동안의 감면이 이루어집니다. 5년 동안에는 100%감면이 되고 3년은 50% 감면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취득세, 등록세는 물론 100% 다 감면이 되겠죠.

그런데 이 감면 외에 기업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환경오염부분이나 인프라 건설과 같은 이런 재정지출수요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다면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증대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업을 유치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에 대한 자구노력정도가 어떤 재정증대와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이 구비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제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기업유치도 필요하지만 기업유치를 좀 독려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데 그건 바로 지역경제 활성화효과가 지방재정수입으로 연계될 수 있는 제도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부분에서는 전 섹션에서 김현기 과장께서 말씀하셨던 지방소득세, 소비세 부분 이런 논의들이 좀더 현실화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세보다는 소득소비세가 훨씬 더 지방재정 수익과 연계가 탁월하다라는 것이 이미 선행연구로부터 충분히 밝혀진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제도가 필요할 것 같구요.

또 하나, 기업을 유치했을 때 이걸 분명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노력한 것이기 때문에 자체적 노력에 대해서는 성과로써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될 것이고. 제가 봤을 때 인정해 줄 수 있는 현재 시스템은 지방교부세의 인센티브제도에 포함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곧 제도화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생각한다면 감면을 통해 재원이 부족한 부분들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전해주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을 유치할 때 특히 외국기업을 유치할 때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될 부분 중 하나가 국내기업과의 역차별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볼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의 예로 성장관리구역 내에서 외국기업의 신설이나 증설은 허용되지만 국내기업은 안 되고 있거든요. 물론 이 제도 자체의 존재의미나 필요성 이걸 논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 때문에 국내기업과 외국기업간에 역차별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을 유치할 때 기존에 있는 국내기업도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사 회 (김성순, 단국대학교)

이삼주 박사님 기업특성에 맞는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는데 인센티브시스템으로서도 지방소비세나 지방소득세의 도입이 필요하다 그런 좋은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학계에 계신 한양대 주만수 교수님 코멘트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 주만수 (한양대학교)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자료가 귀한 자료인 것 같은데 이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분석하시고 그다음에 기존연구결과들을 활용하시고 해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외국인 직접투자들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을것인가, 유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분야에 익숙하지 않아서 좀더 보편적인 코멘트를 해드릴까 합니다.

하나는, 중앙과 지방의 역할에 관련된 말씀인데요. 지방정부의 자율권 말씀을 자주

하셔서 그래서 그와 연관해서, 어떤 기업이 입지를 선택할 때 국가를 먼저 선정하고 어떤 국가 내에서 지역을 선정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제 생각에는 그럴 것 같지 않고 국가와 지역을 동시에 볼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어느 지역하고 중국의 어느 지역 이 중에서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식의 선택이지 한국을 먼저 정하고 이렇게 선택하지는 않을 것 같구요.

그래서 기업들 입장에서 국가와 지역을 동시에 선정하는 거라면 국가와 지방정부가 분리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협력을 해야 되는데 유치에 관해서 행정적으로 국가와 지방정부가 동시에 움직일 수는 없는 거니까 그 역할은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특정지역에 국한된 이슈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앙정부에 정책이라든지 유치를 위한 정책은 지역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 곤란할 것 같고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지역의 중앙정부가 하는 유치 인센티브는 동일한 인센티브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의 인센티브는 좀더 투명하고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지방정부가 자치적으로 어떻게 해외기업이건 국내기업이건 유치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슈가 남을 것이고, 그래서 지방정부의 자율권이 중요한 사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슈는 김 교수님께서 외국기업에 국한에서 논의하시고 아까 발표하시는 중간에 국내기업들은 국내 안에서 움직이는 제로섬게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파트에 대해서 우리 이삼주 박사님 코멘트 하시면서 잠깐 말씀하신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아마 같은 뉘앙스를 갖고 계신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그런 취지를 좀더 확장시키면 국내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입지를 선정할 때 최근에는 한국만 생각하고 하는 기업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많은 기업들은 이미 베트남이나 중국에 많이 있고 대기업들도 유럽에도 가고 한국에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기사들도 자주 나오고 하기 때문에 국내기업들에 대한 고려도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구요.

정부 입장에서는 기업을 유치하는 목표가 지역주민들의 소득 증대하는 것이, 후생을 증진시키려고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고용을 증대시켜야 되고 그런 일

들이 벌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국내기업이건 해외기업이건 그런 것들은 사실 중요한 것 같지 않고, 그 지역에 어떤 기업이건 들어와서 지역주민들의 후생을 증가시키고 고용을 증대시키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외국기업을 하나 유치하고 국내기업은 외국으로 도망가고 이런 식의 역인센티브가 발생하면 곤란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 기업들을 유치하는 문제도 같이 고려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제도도 동시에 그런 것들을 같이 배려해야 될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김 교수님 초반에 말씀하시면서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특수한 분야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는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래서 유지전략차원에서 보면 국내기업과 해외기업을 유치한다면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외국기업을 유치했을 때 지역의 후생이 증가하더라 이렇게 한 것이 있었는데 논문 표4를 보니까 그랬는데 이 데이터들은 순서가 뒤집어져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데서 GDP가 옛날 데이터고 해외유치실적이 최근 데이터여서 GDP 증가율이 높은 국가가 해외유치도 잘하더라 이런 식의 인과관계가 오히려 되는 것 같아서 데이터들을 조금 더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업유치를 위해서 지방재정이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조세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조세를 가지고 경쟁을 해서 유치하려고 하면 서로 조세를 누가 더 싸게 해 줄 것이냐라는 경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조세경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EU에 있는 국가들에서도 많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우리나라 안에서 그런 식의 지방자치단체 간의 해외기업의 유치를 위해 경쟁을 해서 세율을 계속 낮춰주는 경쟁을 하게 된다면 그게 국가 전체적인 상황에서 항상 긍정적일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자율권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라는 생각이 들구요.

지금 물론 조세측면에서는 굉장히 제한돼 있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도 지출 가지고는 경쟁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기업이 들어 왔을 때 그 기업을 위한 인프라

들을 어떻게 구축해 줄 것인가 하는 그런 식으로 지출 사이드에서는 여전히 우리가 차별화하고 경쟁할 여지가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구요.

그것뿐만 아니라 외국의 문헌들 보면 규제 가지고도 경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규제들을 지자체가 어떤 식으로 완화시켜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경쟁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기업이건 국내기업이건 유치를 위해서는 전략이 좀더 포괄적인 고민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와 관련 돼서 그런 경쟁들이 국가 전체의 이해관계하고 같이 좀더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을 보면 비수도권에 대한 차별적 전략이라든가 아니면 더 많은 감면이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더 좋은 전략을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한테 부여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물론 그 과정은 분명한 건 상충관계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동일한 지원체계를 갖고 있으면 기업들이 입지를 선정할 때 어디에 가는 것이 나한테 가장 좋은가 해서 그 자본수익률을 가지고 선정을 하게 될 텐데 만약에 비수도권으로 갔을 때 더 좋게 되는 전략이 있는데 해외기업이어서 지금 우리도 수도권정비법인가 그 법에 의해서 수도권에 입지하는 데는 제약이 많고 지방에 이주하는 기업들한테 혜택이 있는데 그거에 더한 그런 혜택이 꼭 필요한 것인가. 기존에 있는 제도들을 좀 더 리뷰해서 그런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구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지방에 가면 지역형평화라는 좋은 효과가 있는 반면에 효율성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효과가 동시에 발생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우리의 목표를, 그러니까 형평성과 효율성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조합을 이룰 것인가 하는 그런 효과들이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표1>에 보면 2007년에 인천에 새로운 기업 유치가 굉장히 많아지고 그 대신에 서울의 새로운 기업유치는 반으로 줄더라구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간다면 그 기업의 성향이 수도권이라든가 대도시 중심에 있어야 하는 기업인가 아니면 지방에 가도 되는 기업인가에 따라서 입지가 좀더 마이크로한 조세나 지출정책에 의한 인센티브보다는 기본적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성향에 따라 입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인천에서 많이 유치하니까 서울에 반으로 줄고 이런 식의 서로 트레이드오프가 서로 존재한다면 이

런 차별화 된 정책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도 신중하게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겠단. 왜냐 하면 큰 효과는 없을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 회 (김성순, 단국대학교)

주만수 교수님 논평 감사합니다.

지방행정연구원의 서정섭 박사님의 논평이 있겠습니다.

■ 서정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 분야는 많이 연구를 안 해서 깊은 내용은 잘 모르는데 제가 과거에 공부했던 걸 보니까 외국기업유치 이런 것들이 국가산업정책이나 지역정책에서 동시에 지금은 지방에 나름대로 하나의 전략으로 돼서 과거의 전략보다는 지방 쪽으로 가는 측면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방재정의 하나의 새로운 연구 분야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우선 했습니다.

우선 저는 교수님 쓰신 논문에 대한 의문을 먼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논문에서 보면 GRDP가 높은 지역에 외국인기업 입지가 높다고 결론을 하셨는데 인과관계가 그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거꾸로 되는 건지 그것을 한번 좀더 살펴봐야 될 것 같구요.

그다음에 충남 쪽에 기업이 많은데 이거를 좀더 분석할 때 실제 외국기업들이 들어올 때 비용이 적게 들어가니까, 쉽게 말하면 생산요소라든가 소비시장 이런 거 할 때 비용이 다른 지역보다 적게 든다고 판단돼서 온 건지 아니면 충남에 어떤 지원이 많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것과 관련해서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충남 내의 적극적인 유치가 그래서 그런 건지 그런 것은 세부적으로 향후에 이렇게 파악해야 될 것 같구요.

그다음에 교수님은 지방 나름대로 계속 차별화를 말씀하셨는데 계속 얘기하지만 국가차원에서의 차별화는 크지 않을 것 같구요. 이 차별화는 지방 나름대로의 개척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도적으로 세제라든가 보조금이라든가 금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차별화가 어렵고 지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입지를 하도록 하는데 자기들이 어떻게 한다든가, 규제는 국가에서 풀어주겠지만 지방이 조금 더 어떻게 푼다든가, 그다음에 사후관리라든가 생활여건 개선 이런 쪽에서 지방 나름대로의 차별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기업 유치할 때 우리나라만 보면 좀 어려운 것 같구요. 중국하고 일본이 있을 때 우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합니다. 그래서 외국인기업이 우리에게 오는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특구경제자유구역, 제주특별자치도 규제를 푼다든가 외국인전용단지를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입지하는 것이고 개별입지는 상당히 어려운 현상이 아닌가.

그리고 세제나 재정지원, 이런 인센티브 등이 올해 굉장히 많이 바뀐 것 같은데 세제, 금융, 인센티브들이 중국이나 일본을 능가하기 위한 차원에서 올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참조하시구요.

또 언론에 보니까 청주시가 청원군에 기업이 유치되면 그 효과가 청주시에 오기 때문에 청주시가 재원분담을 공동으로 하는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외국기업 유치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에서 주는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혜택, 그다음에 또 다른 데와 공동으로 보조해서 더 많은 보조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혜택도 가계끔 하는 것도 하나의 모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구요.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외국기업뿐만 아니고 국내기업을 유치할 때 여건이라든가 보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조금 쪽에서는 많이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세 쪽에서도 이런 기업유치 관련된 프로그램을 설계해서 수행하는 것도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에서는 강남과학단지가 한 1,500 들어서 만들었는데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유치할 때 이렇게 잘 안 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주만수 교수님도 얘기하셨지만 외국기업유치는 국가, 지방, 지방도 여러 단체가 같이, 그리고 민간기업들 해서 같이 공동으로 해서 외국기업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풀어주고 정착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하는 쪽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런 분야가 지방재정에서 중요한 하나의 테마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역 간 정책 같은 것을 비교·분석을 해서 개선방안을 낸다든가 아니면 실제 외국인 들한테 설문조사해서 애로사항이 뭔가 이런 거를 연구해서 개선방안을 내는 것도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사 회 (김성순, 단국대학교)

좋은 논평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산대 최병호 교수님의 논평이 있겠습니다.

■ 최병호 (부산대학교)

우선 세 분 토론자께서 말씀 많이 하셔서 제가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외국인기업유치라든지 혹은 외국인투자유치에 대한 지방재정의 정책방향 이렇게 모색을 하고 계신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정부 차원의 재정정책이라는 게 있느냐라는 그런 의문입니다. 결국 그런 식의 재정정책이라는 것은 조세정책, 그리고 재정지출정책 이런 유형들이 될 건데요. 다 아시다시피 지방세와 관한 결정권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또 사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세정책은 없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재정지출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자율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만 이 역시 현재 자체재원이 제한된 관계로 여러 가지 제약이 붙는 국비라든지 이런 데 대한 자율권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결국 이런 제한적인 재정정책이 외국인기업이나 혹은 기업투자유치에 있어서의 자치단체에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자율권이 없다, 혹은 이런 차별성이 없다 이런 문제와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류의 연구들이 제가 이전에 보면 항상 결론 부분에서는 차별성을 늘리

고 자치단체들의 자율성을 늘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맺고 있는데요. 사실 기본적으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자치단체가 재정에 관한 정책권한이나 혹은 정책능력, 어떤 식으로든 제약이 많이 되어 있으니 상당히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본질적인 한계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에서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만 주로 로우 데이터를 가지고 많이 해석을 하셨는데 해석상에 문제가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정확하게 실증분석을 하시면 더 좋은 함의를 끌어 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구요.

근본적인 문제는 지방정부가 재정정책을 할 수 있다고 전제했을 때 과연 이게 외국인 기업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혹은 국내기업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그런 의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논문에 나와 있는 표를 보면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외국인투자기업의 건수를 보면 서울, 경기, 인천의 누계를 보면 약 91%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지역이 약 9% 정도인데요. 지역별로 인센티브가 거의 같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91%가 넘는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입주하게 된 것은 결국 수도권이 보유한 다양한 입지적인 여건 때문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권이 보유한 우리 사회 각 부분의 중추관리기능이라든지 혹은 집적의 경제라든지 국내외에 대한 접근성, 그리고 생활의 질이라든지 요즘 이야기 하는 Business Friendly한 그런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 수도권에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주로 집중하게 그런 된 원인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만약에 차별적으로 자치단체들이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을 편다면 수도권이 가진 이런 다양한 입지적인 유리함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를 제공할 때만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국내기업의 유치관한 부분인데요. 지금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도권에 대해서는 다양한 조세측면의 입지규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입지규제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지방에서 국내기업들을 유치한 데는 그렇게 성공적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전경련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보면 수도권 입지 규제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수도권에 투자를 하지 못하는 금액이 약 20조원이 넘는다, 이런 발표를 제

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이 가진 여러 장점 때문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입지규제 때문에 못 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수도권 규제를 풀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앞으로 국내기업의 유치가 지금까지도 어려웠지만 지방의 입장에서는 더 어려워 질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을 고려한다면 과연 지방의 입장에서는, 특히 외국인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서 과연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것처럼 그야말로 집중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삼주 박사님께서 자치단체들마다 사활을 건다고 표현하셨다시피 아마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전담부서를 두고 막대한 비용이나 시간을 들여서 외국인투자유치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앞으로 이 제도가 개선이 돼서 자치단체입장에서 차별적인, 자율적인 어떤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개발하더라도 자치단체 간에 조세경쟁이나 혹은 재정지출경쟁으로 인한 여러 가지 비효율성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고, 또 기업을 실제로 유치했을 때 지금 현재 지방세 구조로 보서는 크게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구조인 점도 있고. 아까 또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기존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역차별 문제 이런 것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많은 한계가 있음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이 문제에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대안은 아니겠습니다만 우리가 혹시 너무 외자라든지 혹은 다른 지역에 입주할 기업들을 우리 지역 내로 유치하기 위해서 기존에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서 지역의 고용이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혹시 소홀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기업들을 역차별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문제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방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기업들이 잘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게 지금 입장으로서는 보다 좀 실효성이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 사 회 (김성순, 단국대학교)

최병호 교수님 좋은 논평 감사합니다.

제가 이 섹션을 마치기 전에 논평과 발표를 들으면서 사회자로서 느낀 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선 윤석완 학회장님이 기초연설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의 순환적 상승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된다는 아주 멋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측면에 일조하는 좋은 발표와 논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생각나는 게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노력했다는 사례, 유명해서 잘 아실 겁니다. 삼성전자가 영국에 공장을 준공했을 때 영국 여왕이 직접 와서 테이프 커팅을 하고 환영을 해 주고,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윈스톱 서비스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와서 발 벗고 나서서 미리 다 유치하는데 도와주고 말이죠. 도로가 없으면 도로도 닦아주고 이런 식으로 편의시설을 제공해 주고 교육시설이 모자라면 교육시설도 해 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성공적인 유치를 해서 가난했던 아일랜드가 불과 10년 만에 2만불에서 4만불대로 올랐다고 하는 그런 유명한 사례를 보시면 외국인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좋은 귀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발표자분 종합적으로 말씀하실 게 있으면 간단히 해 주십시오.

■ 김중웅 (대구한의대)

말씀하신 다른 내용들을 기술적인 그런 부분들은 제가 다 동의하는 부분이고 또 나중에 설명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지적하신 부분들도 다 저희들이 지향해야 될 부분, 그러나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늘어나야 된다. 아마 거기에는 동감하실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의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지나친 경쟁도 문제다. 이제는 국내간의 경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국가 지역 간의 경쟁. 우리 지역에 외국 기업을 유치하려면 그 기업이 중국도 갈 수 있고 일본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유치할 것이냐 하는 부분.

그다음에 거기서 차별화된 상품을 내놔야 한다. 차별화 상품 중에 한 가지 방법이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우리 지역이 전략산업이라는 것도 상당히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은 전

락산업부분이 다 지역마다 달라요. 특색이 다릅니다. 대구 같은 데는 똑같이 자동차를 하지만은 지능형자동차를 하거든요. 그러면 지능형자동차, 창원도 기계 다 합니다. 하는데 그런 부분으로, 즉 산업별로 역점 산업별로 고용효과가 늘어나면서 앞으로 잠재력이 큰 쪽으로 하시면 그게 제가 볼 때는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다음에 지역별로 협력을 했으면 좋겠다.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자치단체 금 그어놓은 데 안 들어갑니다. 어디여도 중요한 게 아닌데 어떻게 하면 가장 환경이 좋은 쪽으로 갈 거냐인데 그것을 서로 상생해서 협력해서 하는 부분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는 우리나라가 이제는 고임금을 주는 직종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적어도 인력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정책을 반드시 고려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 회 (김성순, 단국대학교)

이상으로 이 주제의 발표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노홍석 (전라북도 투자유치과장)

주제발표 : 기업유치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자료 참조)

■ 사 회 (김흥래, 前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보통 학회가 주관하는 이 세미나에서는 전문가인 교수님들이 많이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마는 노홍석 과장님이 그동안의 전라북도 기업유치에 대한 노력과 현재 실태, 향후 전망을 실질 중심으로 발표한 것은 참으로 귀한 자료라고 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노홍석 과장님께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시오.

앞으로도 이런 학회에서 자리에 함께 하신 공직자들이 발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

러분 아시다시피 가까운 일본의 서점에 가면 교수님들이 쓰신 책도 많습시다라는 공직자들이 쓴 책이 참 많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기업유치의 선봉에 서고 그런 사례를 가지고 책도 쓰시고 하실 것이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성길 과장님부터 여기에 대한 논평·토론이 있겠습니까라는 전반적으로 논평보다는 앞으로의 보완점 같은 그런 의견 제시가 있으리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 배성길 (경상북도 투자유치과)

전북의 노홍석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네요.

우리 경북도 전북과 비슷하게 여건이 열악한 환경인데 그런 점에서 많이 감동을 받았 습니다.

저는 KOTRA에 투자협력관으로 경상북도 김관영 도지사가 전격적으로 파견해서 한 1년 반 동안 겪어본 경험을 가미해서 정부의 발표사례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예산부서에 대해서 협조할 사항을 간단히 시간 나는 대로 언급을 하겠습니다.

KOTRA라는 기관은 외국인투자가가 한번쯤은 반드시 방문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경상북도에 투자유치를 위해서 문턱에서 딱 바라보고 있다가 들어오면 바로 낚아채서 우리 지역에다가 유치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 겠습니다.

전북의 발표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공감을 합니다라는 제가 서울에서 느낀 점은 모든 돈이 서울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이 생각하는 지방은 전북이 아닙니다. 경북도 아닙니다. 성남, 수원 이런 가까운 데를 지방이라고 합니다. 분발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경기도나 가까운 데서 오신 분들이 계시지만은 특히 우리 공무원들 서울에 사 업하는 사람 만나보면 대전 이남은 답이 없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특히 투자유치를 담당하는 우리 공무원들은 손발이 닳도록 뛰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방예산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대부분인데 파격적으로 지원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투자 유치라는 게 성과가 하루아침에 나오니까? 최소 3년입니다. 우리 노 과장님께서도 조선 소를 유치하는데 이게 몇 번입니까. 한 100번 정도 미팅하고, 1, 2년 만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정부의 발표사례를 보면 공단 조성이 시급합니다. 내가 사례를 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경상북도지사 김관영 도지사가 왜 도지사가 된지 아십니까? 구미 시장으로 IMF시절에 구미제4공단을 조성했습니다. 예산확보하기에도 힘들지요. 그때 해서 지금의 삼성글로벌기업이 거기서 우리나라를 먹여 살립니다. 제가 2005년도 발표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흑자 규모의 65%를 구미시에서 만들었습니다. 공단조성이 진짜 시급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자치단체장이 4년 동안의 인기를 위해서 절대로 공단에 많은 돈을 투자를 안 합니다. 그렇다면 투자유치 담당 공무원이나 예산부서 담당공무원들은 투자유치 하는데 우선순위를 주세요. 예산을 지원해줘야 됩니다.

또 실패사례를 보면 경북 북부지역에 있는 문경시가 중국 내륙고속도로가 얼마 전에 개통이 됐지 않습니까?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4, 5년 전부터 진행이 되면 언젠가는 딱 되면 공단조성을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서울에서 투자유치 한다고 눈이 벌겍게 해서 A라는 기업을 이거는 진짜 일이 되겠다 싶어서 문경에 갑니다. 땅이 없대요. 거기의 과장 얘기를 들어보면 한탄합니다. 통곡을 합니다. 투자가는 지금 막 몰려옵니다. 문경은 서울에서 지금 2시간 반 밖에 안 걸립니다. 투자자들도 문경이 2시간 반 걸리는지를 몰라요. 그런 거를 우리 공무원들이 특히 예산부서도 인색하지 마시고 투자유치 분야에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자꾸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새만금지역의 대규모 프로젝트는 나름대로 금융회사 프로젝트 파이낸싱 전문가를 영입해서 하겠다는 것은 참 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만금이 지금 현재 정체상태이지만은 경북대운하건설이 지금 안 되잖아요. 새만금은 바로 시작합니다. 행정절차가 빨리 될 거예요. 전북에서 나름대로 포커스를 잘 맞췄다고 보고, 지금부터 준비하면 전북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지역적인 프로젝트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대조선소가 전북에 왔다고 해서 긴장감을 늦추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조선소가 그 사람들이 골이 빈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전북에 갔겠습니까? 울산이라는 지역이 땅값이 비쌉니다. 공단조성이 안돼 있어요. 땅이 없어요. 그래서 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긴장감을 늦추지 마시고 좀더 분발을 해주셔야 되겠다.

지금 울산에 있는 기업들이 거의 다 경북 쪽으로 몰려옵니다. 울산 옆이 경북이잖아요. 땅 값이 쌉니다. 얼마 전에 2005년도에 조선 블록공장이 포항에 우리 도에서 유치를 했습

니다. 우리 도가 물론 열심히 했겠죠. 군산 전북도 열심히 해서 왔겠지만 공단이 일단 있어야 됩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도 수반되니까 우리 예산부서 공무원들도 좀 신경을 써 줘야 됩니다 하는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요.

중국을 타깃으로 하는 투자유치는 지역적으로 봐서는 전북이 잘 했다고 봅니다. 이런 지리적인 여건을 활용하셔야 지역발전에 상승효과가 있지 남이 한다고 해서, 여기 보시면 태양광발전사업, 신재생에너지사업 우리 경북도 합니다. 저돌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경북도 똑같습니다마는 전북이 경쟁력이 과연 있겠느냐? 충남, 충북이 다 먹고 남은 것만 먹습니다. 조선소가 가는 것도 다른 지역은 우선순위 공단지역이 다 유치가 되고 찌꺼기 남은 게 전북이 유치가 안 되니까 땅이 남아 있었으니까 어떻게 갔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점에서 보면 전북이 농업, 식품을 성장 동력으로 하겠다. 참 이거는 포커스를 잘 맞췄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한다면 전북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뭐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도지사가 투자유치에 얼마나 목을 메느냐 내가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도지사는 회식 자리에서 건배제의를 할 때 ‘만들자! 만들자! 만들자!’ 하고 한 잔씩 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일자리를 만들자’입니다. 우리 경상북도는 그 정도로 투자유치에 사활을 겁니다. 울산은 기업을 받들어 모셔라 합니다. 또 충남은 공격적인 투자유치가 지역을 살린다. 그냥 투자유치가 지역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저돌적으로 총만 안 들었지 공격적인 투자유치 안 하면은 지역은 죽습니다. 요즘 돈이 안 들어오고 사람이 안 오는데 지역이 발전합니까?

제가 서울에서 느껴보니까 모든 돈이 강남에 있습니다. 강남 옆, 제가 있는 양재동도 없어요. 강남에 다 있어요. 모든 사업이 서울에 있지 않습니까?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경북에 와서 투자를 하며 전북에 와서 투자를 하겠습니까? 저는 통탄하면서 느꼈습니다. 서울 가서 ‘내 지역도 과연 경쟁력을 가지려면 뭘 해야 되느냐’ 저도 고심하는 건데 우리 전북의 유치과장님도 보고서를 보니까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합니다.

특히 우리 예산부서 공무원들 기업을 예를 들어서 독일에 하나 봤다. 그럼 공무원이 가방 하나 들고 출장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해외경비 다 깎습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칼질 다 해봤죠? 파란, 녹색볼펜 하나 들고 부서에서 너희만 해외 가냐 하면서

예산 다 깎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깎으시려면 도지사님이 수행원 20명 데리고 가는 거 그걸 깎아요. 그것도 필요하긴 합니다. 왜냐? 우리가 투자유치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투자자들에게 보이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투자유치가 이루어지는 건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이루어집니다. A라는 기업을 잡으려면 공무원들이 가서 손이야 받아야, 국내기업 아까 말씀 있었습니까마는 그와 똑같이 해외기업도 손이야 받아야 벌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원리를 확실히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공무원이 만나러 가야 됩니다. 국내기업 가듯이. 왜 해외경비 깎습니까? 예산 작업하면서 절대로 그런 일은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으로 전북에 대한 의견과 예산부서에 대한 요청사항을 마치겠습니다.

■ 사 회 (김흥래, 前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배성길 과장님 고맙습니다.

배 과장님은 경북도에 있을 때 KOTRA 파견을 가거라 하니까 가정문제, 자녀문제로 다 싫어하는데 본인이 갔습니다. 가서 보니 역시 큰 차원에서 볼 때 기업유치문제를 더 터득하고 그런 각도에서 노홍석 과장님의 전라북도 사례를 도와주는 입장에서 몇 가지 코멘트를 한 것 같습니다.

■ 유경문 (서경대학교)

우선 발표자께서 기업유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실무적이면서 여러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좀 기본적인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잘 아시지만 기업이야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노력을 하지 않아도 이윤이 생기는 데는 스스로 찾아오겠죠. 그런데 결국은 지방으로 안 온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윤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지방으로 안 온다는 얘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시대가 되면서 지방의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데 저는 뭘 강조하고 싶냐면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자 노력하고 예산편성을 할 때 증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그러한 것을 사용해서 나름대로 예산편성도 하지만은 오늘

발표하신 이 논문에도 물론 시간이나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그러리라고 생각하지만은 중장기발전에 대해 각 지역의 지리적 자연적 특성이라든가 아까 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의 특화된 특색이 있는, 그런 어떤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이 제대로 있는가. 물론 예산을 세울 때 중장기 예산 편성하지만 그것하고 연계시켜서 또 확장시킨다든가 했을 때 진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중장기발전계획을 물론 갖고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요. 상당한 경우는 제가 가끔 보면 너무 장밋빛의 중장기 계획들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랬을 때는 조금 더 자기지역의 특성 있는 차별화된 발전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구요.

그게 왜 필요하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국가발전전략이라든가 국가발전계획 이런 걸 세울 때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박정희 대통령 시절 때 여러 가지 정치적인 독재나 여러 가지 비판이 있지만 경제적으로 성공한 대통령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경제발전의 방향이나 목표 그런 것을 정확하게 잘 짚어줬다는 것이구요. 또 그렇게 했을 때만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라든가 또 어떤 방법이 모색될 수 있는 것이구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방자치단체도 이제는 과거의 시대하고 다르게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지역의 발전전략이라든가 경제발전전략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된다고 하시면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 됐다고 하시면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5년, 10년, 20년, 30년이라고 하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방향과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것이 기업투자를 유치하고 외국의 투자를 갖다가 끌어들이 때도 그러한 어떠한 중장기적인 발전전략과 맞는 그러한 방향에서 집중적으로 특정한 분야에서 기업을 유치한다든가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배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전북에서 3가지 전략 사업을 하지만은 집중과 선택이란 게 역시 중요하다. 경북에서도 자동차 산업이고 다 하는데 첨단산업 다 하는데 찌꺼기 아니냐 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저는 상당히 와 닿는 게 물론 전북에서 나름대로 고심을 해서 3가지 한 것이지만은 조금 집중과 선택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1차 산업부분이 전국에 비해서 3배나 높은 취약한 그런 구조를 갖고 있지만 그 약점을 장점으로 살릴 수 없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농업에 대해서 농업과 연관된 어떤 식품과 공업이라든가, 물론 그것도 중요한 하나의 조정사업으로 되어 있지만 그러한 것을

집중적으로 키운다던가. 이러한 입장에서 봤을 때 모든 사업을 다 하려고 하기보다는 지금 이 3가지 사업도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한번 재검토를 해서 그 중에서 더 집중적으로 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좀 재검토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생각하구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기업을 유치하는데 지역주민들의 의욕이라든가 의식의 전환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처럼 예전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장이라든가 지방의원들이라든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간부들이 지시하고 명령하는 시대는 딱혀들어가지 않는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의식이 함께 하겠다고 하고 지역을 발전시키고 성장시키겠다고 하는 공동된 어떤 의식이 뚜렷하지 않는 한 지역의 발전을 기대하기 상당히 힘들지 않나. 우리도 경험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에 우리가 경제발전 할 때 박정희 대통령이 무슨 말씀을 많이 했습니까. 잘 살아보자고 노래로 하면서까지 국민들 의식을 바꾸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그렇게 함에 따라서 국민들이 함께 경제발전을 하는 희망도 갖고 의식이 전환됐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하면 지방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기업투자, 외국인투자 다 좋은데 지역주민들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그것을 이끌어내는 역할이 역시 또 중요하지 않나.

왜 그러냐면 기업유치 한다든가 투자유치 한다면 결국은 상당 부분 그 지역의 자연혜손을 한다든가 지역주민들한테 불편을 준다는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주민들하고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주민들이 그것을 감내하려고 하면 결국은 주민들이 이것은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하다 그런 의식을 갖게끔 주민들의 의식전환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한다면 그것을 매년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기능과 역할, 홍보라고 하는 그러한 것도 충분히 해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있으면 더 많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정도로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아까 뭐 법인세 얘기했는데 투자해서 지원 해줘봐야 결국은 중앙정부의 법인세로 다 환수가 되니까 실질적인 혜택이 아니지 않느냐. 물론 맞는 얘가지요. 그렇다고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제도나 관행 고칠 것은 고치고, 만약에 그런 문제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가 안 난다고 하면은 중앙정부에 꾸준히 강력하게 노력해서 제도적 개선 그런 것까지 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동떨어진 얘기인 것 같지만 이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무슨 얘기가

면 144쪽의 신문기사, 조선소를 유치할 해서 도둑질 빼고 다 했다는 것을 자랑삼아서 하셨는데 저도 신문에서 봤어요. 물론 그만큼 지방공무원이나 정부에서 노력했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잘 읽을 수 있는데 저는 신문을 보면서 열심히 노력했다는 생각과 동시에 반대로 한편은 얼마나 편법을 썼을까. 얼마나 편법을 쓰고 부정한 방법을 썼을까.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된 생각이거나 판단이기를 바라는데 제도적으로 위배돼 있고 관행이 잘못되고 했을 때 기업을 유치하려면 그것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안 될 때는 도둑질 빼고 다 했다는 것은 솔직히 얘기하면 법이나 규정에 벗어난 방법을 많이 썼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은 외국인투자자들도 우리나라에 투자할 때 제일 꺼려하는 것이 뭐냐면 공무원들의 부패, 관행의 여러 가지 부패 때문에 한국에 대한 투자를 꺼린다는 것이 오래 전부터 신문에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도 마찬가지라는 얘가지요.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설득을 해서 일시적으로는 투자하겠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기업들도 공무원이상으로 뛰어난 계산을 한다는 얘가지요. 투자를 하고 나면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 가지 규제라든가 여러 가지 것을 걸어서 불편을 준다든가 뇌물을 줘야지만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다면 그것은 기업인들이 더 잘 안 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지방에서도 지방공무원들도, 꼭 공무원이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그렇겠지만 투명하면서 부정부패 이런 것이 철저하게 내부에서 통제되고, 어느 상황이나 어느 시대나 다 있는 것이고 뭐 우리만 많고 어느 특정한 지역만 많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업을 투자하고 외국을 투자하려면 투명한 절차나 투명한 그러한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부정부패를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 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 회 (김흥래, 前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유경문 교수님 고맙습니다.

■ 정병희 (순천시의회)

주제발표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자의 코멘트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소속돼 있는 우리 순천시가 최근 기업 유치한 사례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 한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시는 작년 7월에 순천시 관내에, 경제자유구역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울촌산단에 포스코 마그네슘 판재공장이라는 것을 유치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 판재공장이 우리 지역경제나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이라고 판단을 했지만 이 공장이 건립되기도 전에 과급효과가 예상보다 아주 컸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가 표본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마그네슘 판재공장의 주원료는 마그네슘이 되겠습니다. 이 마그네슘은 현재 실용 금속 중에서 가장 가볍다고 봅니다. 철의 4.5분의 1, 알루미늄의 3분의 2정도라고 하구요. 요즘은 미래의 금속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점으로는 전자파의 차폐성이 아주 우수하다고 그러구요. 진동흡수율이 뛰어나다고 하구요. 또한 원광석이 북한에 세계3위의 매장량이 있다고 그러합니다. 세계1위는 중국인데요. 그래서 아주 밝은 전망이 보이는 미래금속입니다.

그럼 이 마그네슘 판재공장이 우리 순천시에 유치되기까지 투자기업인 포스코, 스타기업 대기업인데요. 이 포스코가 스스로 찾아와서 입주 의사를 표시하지는 않았습다. 당시에 포스코 마그네슘 판재공장 실험실공장이 모기업이 있는 포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항에서는 포항시에 그대로 공장을 지어야 된다고 그랬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다. 마는 정말 우리 시가 대응을 잘했든지 아니면 기존의 인프라가 있었든지 해서 저희 시에 입주가 됐는데요. 단순히 저는 포스코 마그네슘공장이 저희 울촌산단에 입주된 것은 그 당시에 정치인들이나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이나 여러 사람들의 단순한 노력에 의해서 됐다고만 보지 않구요. 저희 시는 사전에 준비 된 게 좀 있었습니다. 해당지역에 R&D 기능을 저희들이 보완을 해봤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신소재산업기술지원화센터라는, 전라남도가 설립한 법인인데요. 기초단체로는 저희 순천시가 약 50억원정도를 협력하고 지원해서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지원센터를 만들었구요. 또 해당지역에 전라남도 테크노파크가 이미 설립돼서 운영 중에 있었구요. 그런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었기 때문에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런 좋은 여건이 있었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포스코를 설득을 하는 과정에서 해당산업부지에 대한 무상임대랄지 무상지원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뒷받침하느냐. 당시에 포항은 굴지의 스타기업인 포스코 제철소가 있었기 때문에 덜했던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 시는 해당 부지를 3만평이든 5만평이면 조건대로 무상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 말로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긴급하게 투자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분들에게 확신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집행부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안을 내놓기까지는 20일에서 1달 정도가 걸리는데 시간이 그때 촉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직접 개정안을 발의를 내서 한 10일 정도 회기를 열어서 바로 처리했던 기억도 있구요. 이렇게 해서 그분들에게 확신을 주어서 이것을 유치했습니다.

그런데 공장이 준공되기도 전에 벌써 전후방산업들이 연관 산업들이 18개가 입주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해룡산단이 완공이 되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포스코에 선분양을 했습니다. 선분양하고 나니까 바로 1년도 안 돼서 18개 정도의 연관 전후방산업들이 입주를 신청했구요.

현재는 울촌산단까지 파급이 미쳐서 지금 저희들은 산단이 없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물리고 투자유치자들이 오는데 저희들이 선별해서 고를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포스코 마그네슘 판재공장 하나로 인해서 그런 많은 파급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면은 이 마그네슘 판재공장, 이 마그네슘이 갖는 여러 가지 의의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이 포스코 마그네슘 판재사업이 갖는 의의는 첫째, 이 포스코라는 회사가 이 포스코 마그네슘 판재가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스트립캐스팅이라고 그러는 연속아변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로 판재생산기술에 성공했구요. 또한 저가 마그네슘 판재를 기반으로 세계 마그네슘 조성산업 시장석권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 마그네슘 판재의 최대시장은 자동차부품이나 전자부품이 되겠는데 요즘은 경량화가 최우선과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10년까지 2,000미리 정도의 대형판재기술에 성공하면은 세계적인 자동차판재생산의 초석을 마련하는 것이 되구요.

그리고 우리 순천시에 이 기업이 유치됨으로써 공장이 유치됨으로써의 갖는 기대와 전망은 이 마그네슘 판재공장유치로 아까 전후방산업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합금, 판재가공, 표면처리, 리사이클 공장, 그리고 마그네슘 빌렛을 이용한 가공산업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량화에 대비한 자동차, 항공, 우주, 각종 전자제품들의 전후방업체가 유치가 기대되고 있구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전라남도의 4대 전략 산업 중의 하나가 바로 신소재분야인 데요. 신소재분야에서 마그네슘이 되겠습니다마는 전라남도 4대 전략산업 중 하나인 신소재분야의 입지지역이 바로 저희 지역입니다. 아까 말했던 울촌산단 해룡산단이 집적화돼 있는 신대선월지구가 되겠는데요. 이 지구가 지금 신소재에 관련된 클러스터가 구축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인 데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 순천시, 포스코, 전라남도, 전후방연관업체, 순천대학교, R&D 기능의 신소재나 신소재산업기술지원화센터나 테크노파크 같은 산업 연관 협력체제의 구축으로 인해서 세계 최대의 신소재 마그네슘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육성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발제를 해 주신 전라북도 노홍석 과장님께서도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방차원에서 기업을 유치하기란 매우 어렵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획기적으로 기여하는 기업을 유치하기란 뭐 더더욱 어려운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은 양질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고, 또 우리 주민들의 시각에서 볼 때는 자치단체의 역량을 저울질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우리 모두 깊이 인식하구요. 신소재분야와 같은 차세대 신성장동력산업을 집중 육성시켜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재정의 일익을 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 회 (김흥래, 前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순천시의회회 정병희 의원님은 간접적으로 전라북도 사례에 대해서 보완 의견을 제시하면서 실제 우리 지방의 공직자들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순천 사례를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대 정종필 교수님 논평이 있습니다.

■ 정종필 (부산대학교)

방금 노홍석 과장님께서 발표하신 게 어떤 이론적인 논문이 아니기 때문에 논문의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전북이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자치단체들이 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노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외에 또 앞에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 외에 좀더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에 대해 한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 과장님께서 전북이 최근 들어서 기업유치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었던 이유로 획기적인 투자인센티브하고 저렴한 풍부한 산업용지,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정책,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강조하신 것이 전라북도의 투자유치 열정을 들었는데 제 생각에는 아까 유경문 교수님도 좀 말씀하셨지만 크게 작용한 것이 전북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적기에 저렴한 풍부한 산업용지를 제공할 수 있었다는 것하고 공무원들의 열정적인 투자유치노력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렴한 풍부한 산업용지 같은 것은 결국에는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는 물리적인 한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새로운 어떤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중국에는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런 하드적인 것 외에 다른 자치단체와는 좀 차별화 되는 유치전략 또는 경쟁력 있는 요인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외람된 말씀일 수도 있지만은 어차피 전남·광주지역에서 연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연구를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남·광주지역에 진출한 어떤 기업들을 대상으로 그런 기업들이 겪은 애로사항들이 뭔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사를 하는 중에 유치된 기업들이 꼽았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보면은 전남·광주지역에 있어서 애로사항으로 꼽았던 것이 뭐냐 하면 지역민들이 유치해 온 기업들에 대한 비우호적 정서 이런 것들을 꼽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1차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잘 이용을 하면은 다른 자치단체들과 경쟁을 했을 때 이와 같은 마인드를 획기적으로 바꾸어서 다른 자치단체보다 우리 자치단체가 조

금 더 우호적이고 또 노사간에 문제가 더 발생하지 않는 이런 어떤 이미지를 심어준다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산업단지를 육성한다든지 또는 획기적인 투자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하는 이와 같은 어떤 막대한 자원이 재원이 투입되는데 비해서 그렇게 큰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다른 자치단체와 차별화해서 큰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방 말씀드린 친기업적인 노사문화, 친기업적인 기업정서를 가꾸어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계속 포커스가 새로운 기업을 어떻게 하면 유치해 올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그리고 전북에서 얼마 전인가 자치단체 유치 포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포상을 전북이 아마 대상인가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대상을 받은 게 군산에 현대중공업을 유치해 온 것 때문에 받은 것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전북 입장에서는 현대중공업을 유치해서 자기네들이 포상을 받은 그와 같은 측면이 있지만 기존의 현대중공업 조선부분이 위치하고 있던 울산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 지역에서 아주 큰 기업이 역유출된 그와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역유출이 일어난 결정적인 이유는 이 교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보니까 울산지역에 적절한 산업용지가 없었기 때문에 나간 측면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울산지역도 아차 싶어서 5월에 울산중공업에서 큰 사업 중에 하나가 건설장비와 관련한 산업블록 공장들이 있는데 이와 같은 것들이 나가려는 조짐이 보이다 보니까 울산지역에 어떤 조치가 취해졌다면 기존에 이화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었고 거기에 여러 가지 기업들의 유치를 받고 있었는데 그거를 울산중공업에게 이화산업단지까지 통째로 제공하는 이와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새로운 어떤 기업을 유치하는 것 못지않게 기존의 기업들이 역외로 유출되지 않고 자기 지역에 남아있도록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렇게 발표하신 내용을 보시면 주로 유치를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전북지역에서 폐업을 했다거나 타지역으로 이전했다거나 또는 타지역으로 이전을 하고 기업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데 대해서는 별로 분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각 자치단체에 계신 분들은 그런 데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있을 것으

로 생각되지만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는 것 못지않게 현재 남아있는 기업들이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고 또 그 지역에 계속해서 남아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보면 새로운 어떤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는 것보다는 기존기업이 투자하는, 또 외국인투자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거든요. 65% 정도가 기 진출한 기업이 투자를 늘리는 그와 같은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수성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업의 투자 못지않게 기존 기업을 수성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병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사 회 (김흥래, 前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회자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바로 이전시간에 발표하신 기업투자유치와 지방재정정책의 방향 이것은 기업유치에 대한 총론적인 얘기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총론적 바탕 위에서도 각론적인 전라북도의 기업유치 과정과 성과, 전망에 대해서 오전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기업유치가 무엇이냐. 유치가 무엇이냐. 시장, 군수가 가서 얘기해서 억지로 끌어온다? 그런 건 아니죠. 유치는 유인초치라고 합니다. 좋은 조건을 우리가 제시해서 상대방이 스스로 오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유치의 본질적인 개념 아니냐. 우리가 오라고 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유인초치다.

자, 유인초치를 하려면 무엇이 문제냐. 오늘 토론자도 말씀하셨고 전번 섹션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이 내 지역이 갖고 있는 지리적, 기후적, 토양적, 각종 자원의 전수조사를 해서 우리 지역은 어떤 지역으로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발전을 해야 되느냐 하는 로드맵, 중장기발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혀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유치에 열을 올리고, 그래서 외국에 가서 뇌물로 작성하고 신문에 발표하고 이런 것을 지역발전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역에는 농촌도 있고 산촌도 있습니다.

탄광지도 있습니다. 기업이 하든 안 하든 우리 지역은 이런 지역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면 그런 전제에 의해서 기업유치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기업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그 지역의 잠재력을 사실은 전제로 하지 않는 정책이라면 우리가 한번 이번 기회에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 기업의 유치, 제가 유인초치라 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유인해서 들어 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가지고 있느냐. 조금 전에 노사문제, 기업정서문제 다 했습니다. 사실은 기업은 우리가 유인초치한다 생각 안 합니다. 기업은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기업이 알아서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유인초치, 그런 환경을 만드는데 그 중심에는 여기 자리를 함께 하신 지방의 공직자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돌아가시면 여러분이 모시고 있는 시장, 군수님이나 지사님께 이번에 갔더니 기업유치는 기업유인초치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지역에 지역발전의 중장기비전이나 계획이 서 있나 다시 한번 검토하고 그 위에서 우리 지역에 맞는 넓은 이유로 기업을 선정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제시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기업유치 열풍에 너무 불을 지피는 것은 중앙정부 책임도 있습니다. 기업도시다 무슨 도시다 해놓고 열을 붙이고 있습니다. 지방은 마치 그런 게 오는 것이 민선장으로서 좋은 것이고, 그것이 주민들이 좋아하는 거니까 그런 것을 유치하려고 노력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공무원생활 할 때 시군구에 농공단지 조성이 아주 대유행이었습니다. 그 많은 농공단지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유치했던 기업들 다 떠났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기업도시다, 산단지다 하는 것도 다시 한번 잘 생각해서 지역에 맞는 그런 정책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마지막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시·도에서 오신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언제인가 지방발전에 또는 지방경제발전의 동량제로서 클 수 있다는 자신과 여러분이 역량을 발휘해서 지방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발전과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지역의 발전을 기원하면서 오늘 이 자리를 어렵지만 만들어주신 윤석완 한국지방재정학회 회장님과 행정자치부, 그리고 김국

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끝까지 토론해 주시고 참여해주신 교수님과 토론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